

# 이산화탄소 추적 시스템 개발

## 기상청, 온실가스 배출·이동량 산출 ... 미국과 정보 교환

어느 나라에서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CO<sub>2</sub>)가 배출돼 어떤 경로를 통해 이동하는지를 독자 추적하는 시스템이 국내에서 개발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탄소추적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앞으로 기후변화 협약 등에 있어 한국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은 전 지구 탄소추적시스템이 이미 본격 가동에 들어가 관측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고 8월21일 발표했다.

지구 탄소추적시스템 개발로 기상청은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농도와 배출·흡수원별 탄소 이동량을 독자적으로 산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탄소추적시스템은 미국 대기해양청과의 협력 아래 구축돼 미국은 북미 대륙,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량을 추적한 뒤 관측 자료를 서로 교환할 예정이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향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관련해 독자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갖추기 위해 탄소의 배출·흡수를 산출하는 탄소추적시스템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추적시스템을 이용하면 각국이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 저감 이행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식생에 의한 탄소 흡수량을 국가별로 산출해 배출권 검증도 가능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 지역으로 보고나 추적이 되지 않는 탄소 배출이 많다”며 “어느 나라에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흡수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앞으로 온실가스 저감 관련 국제회의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추적시스템은 관측 자료가 많을수록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상청은 일본이 발사한 온실가스위성에서 측정한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

또 슈퍼컴퓨터의 처리능력 향상, 위성자료 검증을 위한 항공관측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기상청은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기상청 관계자는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수행 과정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능력이 필요해 시스템 개발 및 가동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재(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8/22>